
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

2019. 4. 24.

금 융 위 원 회
법 무 부

목 차

I. 검토 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	4
1. 주주총회 성립 지원	4
2.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	6
IV. 향후 추진계획	10

I. 검토 배경

-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*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

* 주주총회에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이사·감사의 선임을 포함한 회사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

-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, 주주총회 진행 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

* [17년 주총백서] 평균 주주총회 진행 시간 : 31.1분(10~20분인 기업 비중 : 27.1%) / 주총시 평균 발언주주수 : 3.9명 / 1인당 평균발언시간 : 2.1분

-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등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노력도 부족

- 새도우보팅제도* 폐지,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제고 등으로 형식적 주주총회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

* 새도우보팅제도는 상장기업들이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“주주없는 주주총회”가 가능하게 했던 측면

-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*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할 필요

*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수 : ('18년) 76개사, ('19년) 183개사

- 대주주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투자자들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

- 현행 주주총회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내실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

- 특히,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

Ⅱ. 현황 및 문제점

1. 주총 성립 측면

□ 회사가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존재

- 회사가 보유한 주주의 정보는 성명·주소에 한정되어 주주에 대한 직접 방문 외에는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
- 주총에 관심이 크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
 - 특히,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허용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*한 측면

* 대법원은 골프장 예약권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법상 금지되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판시(대법원 2013마2397)

□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주주 중에서 주식매각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적은 사례(공투표, Empty voting)가 다수 발생

- 주주총회 참여 주주 확정 시기와 주총 개최일간 시차(3개월)가 길어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는 상황이 빈번

* 예) 코스닥기업 주주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2개월이나, 주주명부는 주주총회 개최 3개월 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확정

□ 전자투표제도 도입 후 모바일 전자투표 시행('17.12.20) 등으로 전자투표 활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,

* 정기주총 전자투표 활용주주수(만명) : ('16) 1 ('17) 1.1 ('18) 3.6 ('19) 11.0
정기주총 전자투표 행사율(%) : ('16) 1.4 ('17) 1.76 ('18) 3.9 ('19) 4.94

- 투표를 위한 본인인증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전자투표 참여 관련 일부 불편 사항이 존재

2. 의결권 행사 측면

□ 의결권 행사를 하기에는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안건을 심도 있게 분석할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

①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주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대상회사와 경쟁사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

*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,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우회

② 촉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일정으로 면밀한 안건분석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데 한계

* 3월 중순 이후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관행과 맞물려 안건 분석 시간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

③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상세 정보도 크게 부족

- 임원 선임안건에 후보자 관련 정보가 간략하게 적시되어 있고
임의로 정보 생략도 가능하여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 존재

- 주총 소집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, 재무제표의 신뢰성이
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

* 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보고서 제출 1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, 주총 소집통지는
주총 2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어 소집통지시 감사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함

□ 주주총회가 특정일·특정 주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주주
총회 참석이 어렵고, 충분한 안건 분석도 곤란한 상황

○ '18~'19년 정기주총기간 중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을 운영
하고, 집중기간에 주총 개최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,
실효성 있는 주주총회 분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

* TOP3 집중도(%) : ('17) 70.6 ('18) 60.7 ('19) 57.8

** TOP1 집중도(%) : ('17) 48.5 ('18) 27.8 ('19) 26.4

Ⅲ.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

1

주주총회 성립 지원

가.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

- ☐ **(현황 및 문제점)** 상장회사가 주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
 - 특히, 개인주주가 많은 소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소 정보로는 주주총회 참여 유도에 어려움
 - * 직원 및 사설 의결권 위임 대행기관 등을 통해 주주 소재지를 방문하여 주주에게 위임장을 받고 있으나,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
- ☐ **(개선)**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현행 상법(§352의2)은 전자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증권회사로부터 동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미비

※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 §315③ 개정

나.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

- ☐ **(현황 및 문제점)** 주총에 관심이 높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나,
 -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
- ☐ **(개선)**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

※ (요조치사항) 상법 §467의2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

다.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공인인증서 없이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제한적*이어서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

* '19.4월 현재 전자투표 관리기관은 예탁결제원, 미래에셋대우 2곳에 불과

- 특히,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 거주 중인 주주 및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에 애로

- **(개선)**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,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

-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·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, 외국 거주자에게는 ID·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

* 대만의 경우 상장사가 주주에게 발송하는 ID·비밀번호만으로 전자투표 가능

-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·접근성 제고

※ (요조치사항) 상법 시행령 §13 개정

라.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주주를 특정하는 기준일을 주총 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설정

-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(공투표, Empty voting)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

- **(개선)**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의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

* 주요국 기준일 : 미국 (70일), 독일 (21일), 호주 (2일)

※ (요조치사항) 상법 §354 개정

* 관련 상법 개정안(박용진 의원 대표발의)이 법사위 계류중('18.4.5 발의)

가.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주주총회 소집통지*시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

* 상장회사의 경우 1%미만 보유 주주에게는 금감원 공시시스템(DART) 게재 또는 일간지 2회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

○ 내부감사 완료된 재무제표 외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임원 연임여부 및 임원 보수 결정시 성과에 기초한 평가가 곤란

○ 외부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1주일 전에 공개되어 재무제표의 변경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전을 분석

□ **(개선)**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*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

* 자본시장법(§159)에 따라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이 의무화

※ 개별 회사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, 특별결의가 용이치 않은 회사(예 : 소액주주 지분율이 2/3이상인 회사)에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검토

□ **(기대효과)**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상당 폭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전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

①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3월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~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전망

② 사업보고서가 제출(3월말) 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여타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

※ (요조치사항) 상법 시행령 §31④ 개정

나.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이사·감사 등 선임시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
 - 주된 직업 및 약력만을 기술하되 되어 있어 체납여부,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후보자 임의로 생략 가능
 - 후보자의 독립성(사외이사인 경우)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
- **(개선)** 이사·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
 - ①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
 - 특히, 체납 사실,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
 - ②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직무수행계획서(사외이사)와 이사회에의 설명과 추천 사유 등도 적시
- **(기대효과)** 임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이 축소
 - 주주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탐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보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
 -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도 보다 강화

※ (요조치사항)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§3-15③ 개정

다.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주주총회시 전년도 이사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*,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 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

*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이사보수 지급금액은 주주총회 이후에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시

- **(개선)**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

※ (요조치사항)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§3-15③ 개정

라.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주총 소집통지일이 주총 전 2주로 선진국과 비교시 지나치게 짧아 안전 분석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

* 주요국 소집공고 기한 : 미국 (10~60일, 인터넷 공고시에는 40일), 독일 (30일), 호주 (4주일), 영국 (3주일)

- **(개선)**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하여 충분한 안전 분석 시간을 제공

※ (요조치사항) 상법 §542의4① 개정

* 관련 상법 개정안(박용진 의원 대표발의)이 법사위 계류중('18.4.5 발의)

마.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주주총회가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*되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, 안전 분석도 쉽지 않은 측면

* 정기주총 TOP 3DAY 집중도 : ('17) 70.6 ('18) 60.7 ('19) 57.8

- '18~'19년 정기주총시 공시 인센티브 및 집중개최 사유 공시 등을 통해 분산을 유도하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음

- **(개선)** 특정일,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*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

* (대만사례)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['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 주총 개최를 허용]

※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

IV. 향후 추진계획

-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
- '19.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확정
-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*부터 신속히 추진하고, '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마무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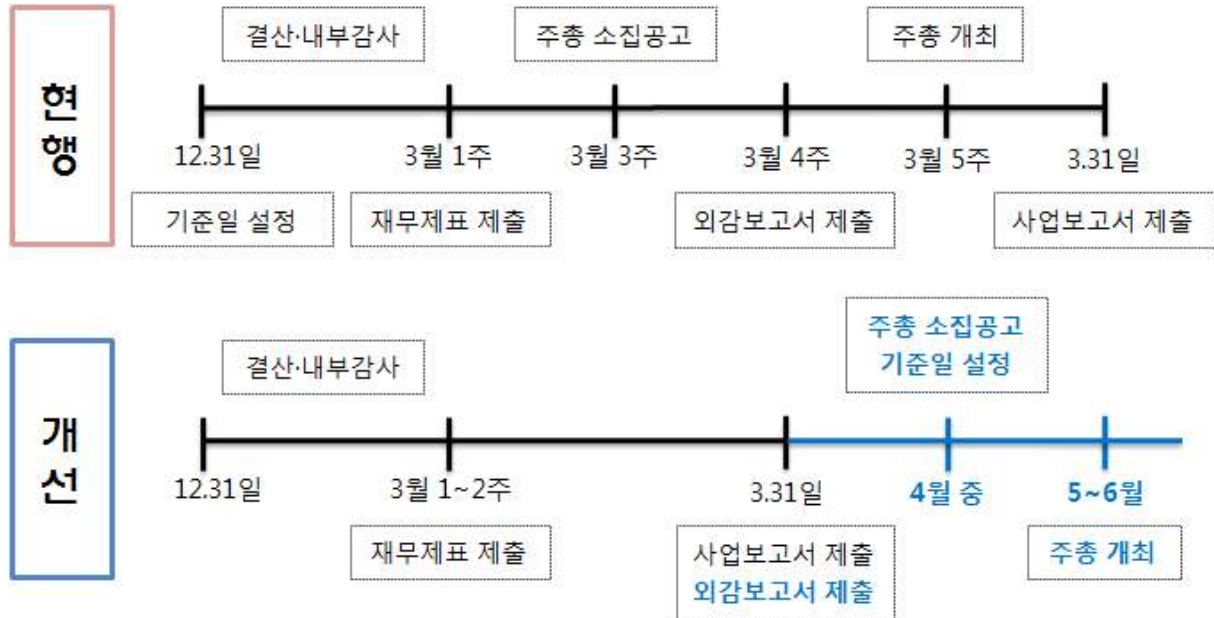
* 상법 유권해석 추진,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증발공규정 규정변경예고 등

< 과제별 추진 계획 등 >

추진 과제		추진 계획	담당 부처
주주총회 성립 지원	①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 제공	'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	금융위
	②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	'19년 상반기 중 상법 유권해석	법무부
	③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	'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	법무부
	④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	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	법무부
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	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 통보 의무화	'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	법무부
	⑥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	'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	금융위
	⑦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	'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	금융위
	⑧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	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	법무부
	⑨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	'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	금융위

참고1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

<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 >



현행 :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총

[촉박한 일정] 3월중 내·외부감사, 주총 소집공고, 주총 개최까지 마무리 필요

[부족한 정보] 주총시 재무제표 외 정보 없음

[Empty Vote ↑] 이미 매도한 주주의 비율이 높음

[짧은 분석시간] 안건 분석시간이 2주에 불과

개선 :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

[충분한 일정] 내·외부감사기간 연장,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준비 가능

[정보량 증가]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경쟁사 비교·평가 등이 가능

[Empty Vote ↓] 이미 매도한 주주의 비율이 낮음

[분석시간 확보] 안건 분석시간이 4주로 연장

참고2 '19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

1. 주주총회 의결 현황

- 올해 3.30일까지 1,994개(유가 756, 코스닥 1,238)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,767개사의 경우 주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
 -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183개사*(9.2%)로 전년(76개사)대비 2.4배 증가
 - * 주총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총 227개사이지만, 이중 44개사는 표대결 과정에서 반대표로 인해 안건이 부결
 - 의결정족수 부족 183개사의 안건은 각각 감사(위원) 144개사, 정관변경 30개사, 임원보수 승인 등 보통결의 안건 9개사
 - * 감사안건 이외에 복수 안건이 부결된 경우 의결정족수가 낮은 안건(보통결의)으로 집계
 - 의결정족수 부족 183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6개사,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57개사

< '18~'19년도 정기주주총회 결과 비교 (단위 : 개사, %) >

구 분	'18년 정기주총			'19년 정기주총		
전체 (A)	1,933			1,994		
감사(위원)선임 (B)	654			883		
부결(정족수부족) (C)	76			183		
구 분	유가	코스닥	전체	유가	코스닥	전체
감사(위원)선임 (D)	5	51	56	23	121	144
특별결의 안건*	-	8	8	2	28	30
보통결의 안건**	-	12	12	1	8	9
정족수부족에 따른 부결비율 (C/A)	3.9			9.2		
감사(위원)선임 부결비율 (D/B)	8.6			16.3		

* (출석주주주식 2/3, 발행주식 1/3 이상 찬성 要) 정관변경, 분할·합병, 영업양수도 등

** (출석주주주식 1/2, 발행주식 1/4 이상 찬성 要) 재무제표 승인, 임원보수, 이사선임 등

2. 전자투표 이용률

□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상장회사는 총 654개사
(1,994개사 중 32.8%)로 전년(486개)대비 168개사 증가(+34.6%)

○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는 11.0만명으로 전년(3.6만명)대비 3배
증가하였으며, 투표율도 3.90%에서 4.94%로 1.3배 증가*

* 전자투표율 상승 원인 : 전자투표 홍보 및 참여 유도(참여 주주 전원에게
기프트콘 제공), 신규사업자(미래에셋대우) 진입, 회사의 전자투표 접근성 제고 노력 등

< '17~'19년도 전자투표 이용률 비교 >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
전자투표 참여회사 수	688개사	486개사	654개사 (99개사는 미래에셋 전자투표 시스템 활용)
비율	37.4% (새도우보팅 활용 목적)	25.1%	32.8%
전자투표 활용주주수	1.1만명	3.6만명	11.0만명
전자투표율 (행사 의결권/전체 의결권)	1.76%	3.90%	4.94%

3. 주주총회 분산율

□ 올해 정기주총에서 주총 개최일 TOP3 집중도(57.8%) 및 Top1
집중도(26.4%)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인
'17년과 비교 시 상당 폭 감소

** Top3 집중도 : '17년 70.6% → '18년 60.7% → '19년 57.8%

** Top1 집중도 : '17년 48.5% → '18년 27.8% → '19년 26.4%

1. 소액주주의 주총참여 환경 개선

① 상장협·코스닥협 주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운영

- 협회가 집중예상일을 선정*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통보(2.22일까지)

* '18년 주총 집중일을 감안하여 집중도가 높았던 3월(3월 22일, 28일, 29일) 선정

- 주총 집중일*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 통지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

* 주총 집중일 : 집중예상일 & 협회 분산유도 기준(유가 80개사, 코스닥 130개사) 초과일

-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*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

* 집중예상일을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2.22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, 통보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

<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인센티브 >

- (불성실공시 벌점 감경) 해당 회사가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벌점을 감경(2점 이내,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)

- (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)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상 가점(60점 중 5점) 부여

* (혜택) 상장수수료 1년간 감면,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(3년내 1회),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통한 평판 제고 등

- (수수료 인하) 예탁원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수수료 50% 인하(수수료 감면을 확대 : '18년 30% → '19년 50%)

- (시장조치 유예 요건 인정) 사외이사·감사위원회 미선임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 중 하나로 주총 분산을 인정

② 전자투표 편의성·접근성 제고

- 관리종목 지정 예외*가 적용되는 전자투표·위임장 관리기관을 예탁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**

* 주총 정족수 미달로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(전자투표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) 인정시 관리종목 미지정

**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('19.1월)

2. 소액주주의 주총참여 독려

① 증권회사 등을 통한 주주총회 참여 안내

- 증권사 등을 통해 소액주주 등에 대한 주주총회 안내 강화*

* 증권사 홈페이지, HTS, MTS 등을 통해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안내 등

② 전자투표 참여 주주에 대한 기념품 제공

-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독려 및 전자투표시스템 홍보를 위해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경품 제공(예탁원)

3. 주총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

① 주주총회 및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대국민 홍보

-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2~3월 중 공익광고, 전자투표서비스 홍보 등을 통해 주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(예탁원)

② 상장기업 대상 전자투표시스템 홍보·교육

-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안내·교육 강화*

* 상장협·코스닥협 주관 특별 연수 강의(8회 완료), 전자투표 관련 업무 안내책자 발송(예탁원, 2,300개사), 전자투표 실무연수교육(예탁원, 200개사) 등